

대통령 말도 무시 노동부, 죽음으로 돈 버는 현대차자본

13일,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조합원 산재사망... “비상정지 스위치만 있었어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또 산재 사망사고가 났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주 아무개 조합원(27세)이 12월 13일 14시 35분쯤 A열연압연공장 설비 정기보수작업 중 기계 장치에 1차로 가슴 부위가 끼었다. 이 장치가 다시 움직여 주 조합원은 주저



앉았다. 다른 작업자가 주 조합원의 의식을 확인하는 사이 장치가 다시 움직여 2차로 머리가 끼여 사망했다. 주 아무개 조합원은 지난 9월 24일 결혼했다. 유기족은 임신한 부인이다.

주 아무개 조합원 작업 시 기계 전원과 유압이 차단되지 않았다. 동료가 주 조합원 옆에 있었으나, 바로 설비를 멈출 수 있는 비상 스위치 등 안전장치가 없었다.

현대제철지회는 ▲전면 작업중지, 현존 위험 안전보건 조치 ▲안전작업 계획 마련 ▲주 아무개 조합원 죽음 철저 진상규명 ▲사업주의 책임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측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주 아무개 조합원이 정기보수작업을 하던 기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92조에 따라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유해위험 기계다. 법률이 규정한 최소한의 비상 멈춤 스위치만 있었으면 2차 머리 끼임 사고

는 일어나지 않았고,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여러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2013년 다섯 명의 노동자가 아르고 가스 누출로 사망했고, 최근 1년 사이 산업재해로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 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사망사고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한 뒤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하겠다” 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과 동료, 지역 공동체 삶까지 파괴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그러면서도 일각에서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와 장치를 불합리한 규제로 간주해 왔다” 라고 비판했다.

이후 노동부는 ‘중대 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해체 운영기준’ 지침을 수

립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내용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각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이 확보됐다”는 의견을 표명해야 작업 재개를 허락한다는 방침 세웠다. 또 현존하는 위험의 안전조치는 물론, 향후 안

전작업계획까지 현장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13일 사고당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정기근로감독 중이었다. 사고 뒤 현장에 근로감독관 두 명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두 명이 있었지만 이들이 취한 조치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노동부는 스스로 발표한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매뉴얼’에 따른 긴급지원시스템을 가동해야함에도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아 추가 산업재해의 위험을 방치했다.

현대제철지회는 현장의 근로감독관이 주 아무개 조합원 사망사고가 일어난 뒤 ▲전면 작업중지 명령 자체를 내리지 않았으며 ▲범위 역시 전면 작업중지가 원칙임에도 부분 작업중지에 그쳤고 ▲사고조사를 노동조합을 입회시키지 않고 일방으로 진행했으며 ▲조사내용 역시 노동조합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더는 못 기다린다. 중형조선소 살려라 ”

중형조선소 생존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인력 구조조정이 조선업 경쟁력 발목잡아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부산양산지부가 12월 14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중형조선소 올바른 생존대책 마련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중형조선소를 살릴 실질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와 채관단은 12월 12일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실사를 두 달 동안 벌여 STX조선과 성동조선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경남지부 STX조선과 성동조선,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들은 결의대회에서 중형조선소에 대한 무조건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조선산업을 고려한 지원정책이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노조 경남지부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대책위는 조선산업 숙련 인력이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인데, 강제 인력구



구조정은 조선업 경쟁력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 지적했다.

송명주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조선소 노동자들은 조선산업을 구조조정을 하려는 정부 정책과 국책은행의 횡포로 물량이 있어도 공장을 돌릴 수 없다”라며 “노동존중이 문재인 정부 공약이지만, 결국 노동자가 싸우지 않으면 노동존중을 끌어낼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강기성 성동조선해양지회장은 “영해5도

한파 속에서 성동조선 노동자들은 배를 수주하게 해달라고 수출입은행에서 노숙 투쟁 중이다”라며 “국책은행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의 수주를 막고 수만 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길거리에 내모는데 정부는 더 기다리라고 한다. 더는 못 기다린다. 지금 당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고인철 STX조선지회장은 “12월 8일 정부 산업정책 회의에서 금융 논리 구조조정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지만, 여전히 노동자 자르고 임금 축소하고 가정 파괴하는 고통 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소 지회 대표자들은 청와대에 중형조선소 생존을 위한 금속노조 요구안을 전달했다. 조선소 노동자들은 청와대로 가는 길목에 중형조선소 생존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펼침막을 설치하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 근로기준법 개약하면 노정관계 파탄 ”

청와대, 공약 파기·자본 선물·장시간노동 조장...민주노총, 근기법 개약 저지 총력 투쟁한다

민주노총이 청와대와 국회의 휴일 노동 수당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12월 1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뒤엎은 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약을 강행하면 노정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다”라고 경고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개약 추진 주체는 국회와 청와대이다. 청와대가 작심하고 명령을 내렸다”라

며 “대법원이 휴일노동 중복할증 관련 변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치 개입을 한 셈이다. 실망과 분노를 넘어 청와대를 강하게 규탄한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은 지난 달 23일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약안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주 52시간 단계적 시행(기업규모별 3단계 시행, 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전면 시행)’, ‘중복할증 제도 폐지(휴일노동 수당 삭감, 2배 → 1.5배)’,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 축소 유지(26개 업종 → 10개 업종,

노선버스 제외) 등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월 12일 비공개 당청정 회의에서 휴일노동 중복할증을 막는 방향으로 처리하지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노동자의 분노를 일으켰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연장-휴일노동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약 중단 ▲장시간 노동 허용하는 근기법 59조 특례업종제도 폐지 ▲건설근로자법 우선 처리를 정부가 받아들이라고 요구했다.